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소극행정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신설하는 등 신상필별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

- 1)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 2)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를 회계질서 문란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부작위·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비위에 대한 최소 양정기준 강화

나. 혐오 표현 비위 징계기준 신설(제4조제2항, 별표1)

- 1) 품위유지 의무 위반 비위에 혐오 표현 유형 신설
- 2) 징계감정 제한 비위 유형에 혐오 표현 추가

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기준 강화(제2조제2항, 별표1의2)

-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에 대한 관리자 감독 책임 부여
- 2)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비위를 여비 부정수령과 비위유형을 분리하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양정 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23.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비규제 대상임을 확인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을 “직무태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혐오 표현

별표 1 제1호 다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라목(종전의 제1호 다목)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란 중 “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마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란 중 “감봉-견책”을 “감봉”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	----	-------	-------

별표 1 제1호 마목(중전의 제1호 라목)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란 중 “감봉-견책”을 “감봉”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혐오 표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	-------	-------	-------	----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제2호에서 “다목”을 “라목”으로, 제3호에서 “타목”을 “파목”으로, 제4호에서 “파목”을 “하목”으로 각각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바목에서 ‘혐오 표현’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현(말, 글, 동작 등)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제2조 제1항 관련)”을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징계기준 (제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위의 유형	부정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별표 1의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50만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50만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별표 1의2의 비위의 유형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2.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부당수령”을 “부정수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란, 비정상적 프로그램 사용(매크로 등), 대리입력, 퇴근 후 실적 입력 등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를 말한다.

4.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실적을 대리입력하는 등 조력한 자는 부정 수령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4조, 별표 1, 별표1의2,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협의 당시)	(현재) (협의 당시)	

2. 비위 유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매매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희롱	([] 해당함, [] 해당 없음)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해당함, []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 해당함, [] 해당 없음)
	소극행정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함, []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	([] 해당함, []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협오 표현	([] 해당함, []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6. 그 밖의 사항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 해당함, [] 해당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함.
	퇴직 예정일
	정년: , 계급정년: , 근무기간 만료: , 그 밖의 사항(): . . .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근무경력: 년 월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생략)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②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u>	2. ----- <u>직무태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u> ----- : ----- ----- -----

3. <신 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14. (생 략) 15. <신 설> ③ (생 략)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u>협오 표현</u> ③ (현행과 같음)
--	---